



I S S U E P A P E R

2018

각자도생 시대 오롯이 살아가는 서울시민들 사회적 우정으로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어야

신인철 최지원

CONTENTS

01 각자도생 시대 헤쳐나가는 서울시민들

- 1_1인 가구,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지지망 '취약'
- 2_사회참여율 낮고 '문제 스스로 해결' 비율 높아

02 '서울 함께 그리기' 위한 중심적 가치는?

- 1_자유주의적 관용: 사적 영역에서 갈등 조정의 장치
- 2_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비현실성의 한계 극복 '대안'
- 3_사회적 자본: 사회구성원 간 경제·정치·문화적 촉매

03 사회적 우정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 '열쇠'

- 1_우정: 사적 관계 포함 정치적 관계 형성하는 가치
- 2_사회적 불평등 해결하는 우정의 4가지 민주적 속성

04 사회적 우정으로 '함께 만드는 서울'

- 1_서울시 민선 5~6기, 사회적 우정 관련 각종 정책 추진
- 2_시정 기초, 사회적 우정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요약

사회적 우정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할 ‘新가치’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서울시민들이 함께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어울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민선5기부터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던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 우정을 새로운 시대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우정은 우정이라는 친숙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대 이후 대부분 사적 관계에 국한된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우정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더 넘어서는 사회 동학의 핵심적 가치로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정 패러다임, 사회적 우정 강조 바람직

특히, 우정이 가지고 있는 동등성, 조화, 세계성, 소통성이라는 민주주의적 속성을 통해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배제와 획일화가 아닌 차이의 인정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인정과 조화를 이끌 수 있으며, 차이와 결속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의 성공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울시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정치철학의 기초를 사회적 우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01 / 각자도생 시대 헤쳐나가는 서울시민들

1_1인 가구,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지지망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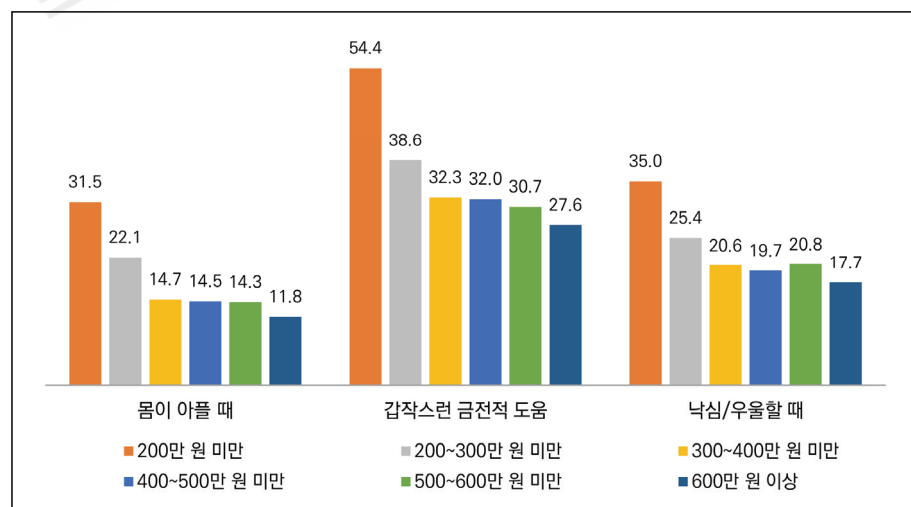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금전적 도움 못받는 경향 많아

한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여기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으로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이나 사랑, 인정 등과 같은 정서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을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윤현숙이미진, 2007).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난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고립감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서울시민들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프거나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낙심이나 우울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금전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

(단위: %)

[그림 1]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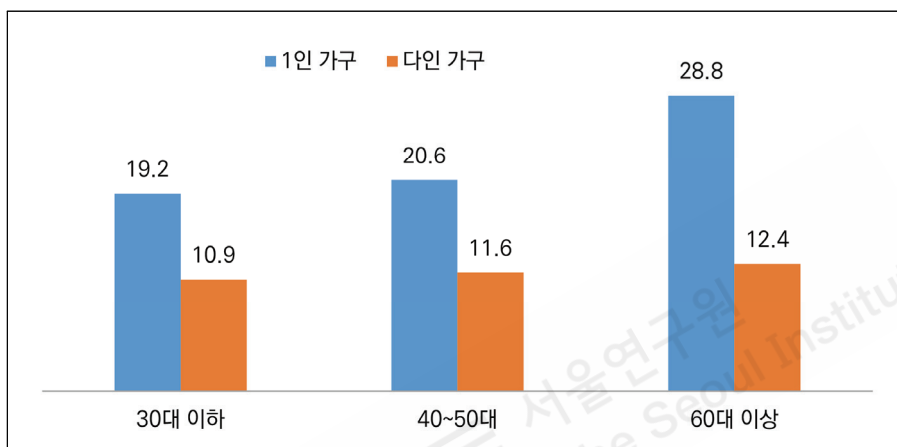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2017 서울서베이』 원자료.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사회적 지지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족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원망이 작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현실의 문제와 바로 직면해야 하고,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현저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사회적 지지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2]
가구구성별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비율

주: 1) 가구소득 계층 구분: 저소득층-300만 원 미만, 중간소득층-300~500만 원 미만, 고소득층-500만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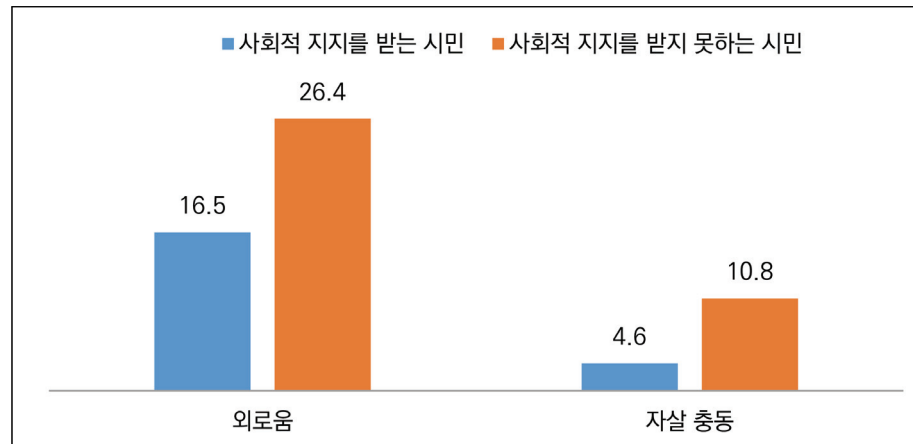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2017 서울서베이』 원자료.

사회적 지지망 없으면 외로움 더 느끼고 자살 충동률도 더 높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은 직면한 난관을 넘어서는 데 큰 힘과 위안이 된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 참조),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더 느끼고 있었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3]
사회적 지지별
외로움과
자살충동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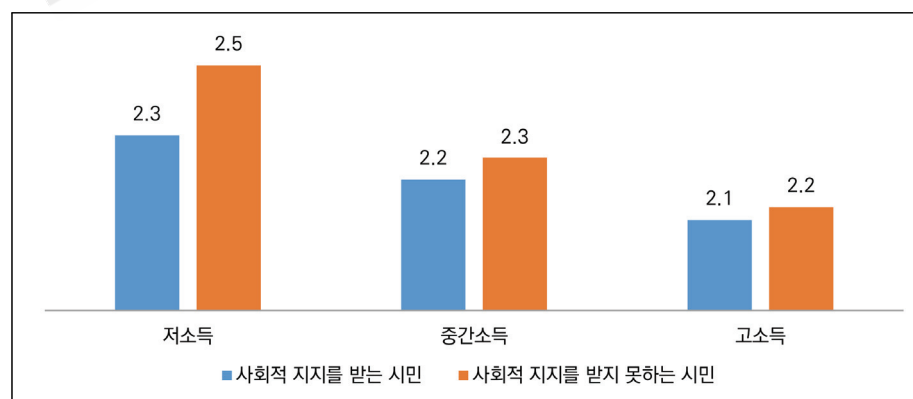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사회적 지지망은 삶의 목표 세우고 희망 갖고 살게 해주는 버팀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은 작지만,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삶의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저소득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가치관이 적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삶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위: 점)

[그림 4]
사회적
지지여부별 삶의
부정적 가치관
격차



주: 1) 가구소득 계층 구분: 저소득층-300만 원 미만, 중간소득층-300~500만 원 미만, 고소득층-500만 원 이상

2) 삶의 부정적 가치관: 4점 척도로 측정된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와 '내가 얻으려 애쓰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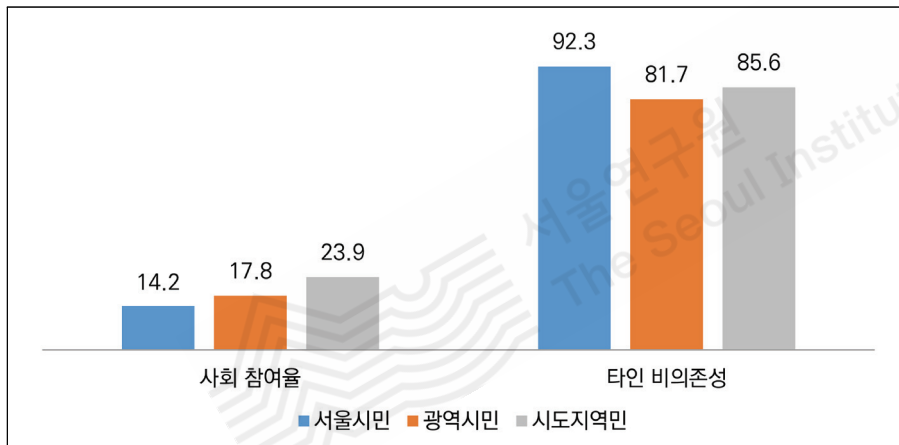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2017 서울서베이』 원자료.

2_사회참여율 낮고 ‘문제 스스로 해결’ 비율 높아

서울시민은 다른 지역민보다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다음으로 현재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단체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타인의존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광역시민이나 시도지역민보다 서울시민은 상대적으로 사회단체나 모임 등과 같은 사회참여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 경우 서울과 달리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들은 개인적 문제를 타인이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단위: %)



[그림 5]
지역별
사회참여율과
타인 비의존성

주: 1) 사회참여율: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조직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비율.

2) 타인 비의존성: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그러나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민들이 지역사회참여율은 낮지만, 정착 참여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으로 타인 공감도가 높아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감과 자긍심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단위: %, %p)

[표 1]
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지역소속감

	서울시 소속감	거주구 소속감	거주동 소속감
사회단체 미참여자(A)	63.65	57.31	55.37
사회 단체 참여자(B)	69.55	63.35	61.05
격차(B-A)	△5.9	△6.04	△5.68

주: 1) 사회단체 참여자: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조직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참여하고 사람

2) 지역소속감: 현재 살고 있는 시, 구, 동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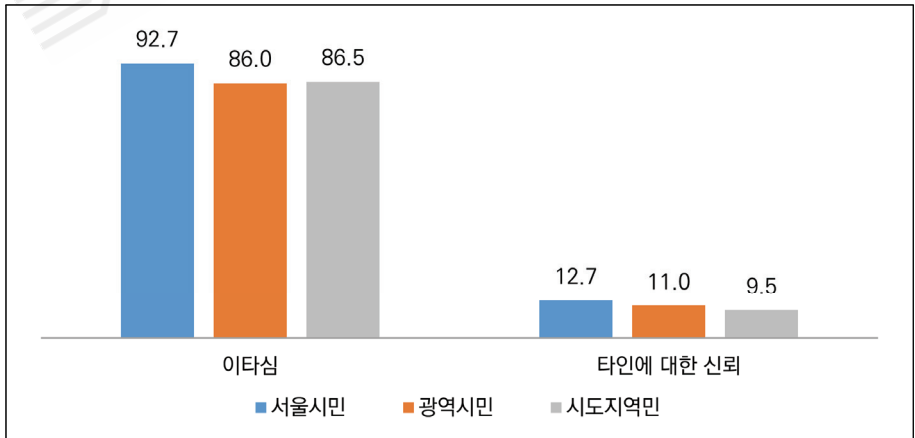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민보다 이타심·타인 신뢰도는 높아 '고무적'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다른 지역민에 비해 서울시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다소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끌었던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실천으로 발현될 수만 있다면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의 구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단위: %)

[그림 6]
지역별 이타심과
타인신뢰도



주: 1) 이타심: '더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

2) 타인에 대한 신뢰: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

자료: 서울특별시, 『2017 서울서베이』 원자료.

02 / '서울 함께 그리기' 위한 중심적 가치는?

앞서 우리는 서울시민들이 각박한 현실을 오롯이 혼자 부딪치면서 함께 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의 현실은 더욱 외롭고 쓸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개인 스스로가 각자도생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밖으로 나와 사회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감까지 높일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리와 떨어져 힘든 삶을 여전히 혼자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자는 말을 건네야만 한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서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또는 미래 비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서울'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핵심적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재검토해보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논의한 후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1_자유주의적 관용: 사적 영역에서 갈등 조정의 장치

킹 “관용은 개인·이론 등 특정대상에 반대·시인 않고 용납하는 것”

17세기 이후 개인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더 나아가 사회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개인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의식과 이성을 지닌 주체, 자신을 소유하는 자유주의 시장의 주체, 민주주의적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평등한 시민으로 우뚝 서게 된다(권용혁, 2014 재인용).

이러한 근대적 개인을 기반으로 성립한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개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공동체나 국가도 개인 간의 협상과 합의를 거쳐 폐기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 하지만 자유주의에서 전제하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사적 이익만을 취하려 한다면 사적 소유권과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개인과 서로 만나는 공적 영역에서 보편적인 화해원칙을 설정하여 공적인 영역을 규제하는 보편적 원칙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의'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하는 한계원칙이자 보편주의적 규범으로,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질서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이상형, 2016: 334 재인용).

이처럼 정의가 공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갈등과 이익의 충돌을 규제하는 기제라면, 사적인 영역에서 갈등 조정 장치도 필요하다. 자유주의에서는 바로 이것이 관용(tolerance)이라고 본다. 즉, 자유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각기 이해를 달리하는 다원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면 하나의 공동체가 다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하다. 자유주의에서는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가진 타인들을 관용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이상형, 2016).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관용은 무엇인가? 라틴어 'telerarein'에서 파생된 관용은 사전적으로 보면 인내, 참음을 의미한다. 반면, 관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킹(King)은 부정적 표현인 반대(objection)와 긍정적 태도인 용납(acceptance)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관용으로 보았다. 이를 풀어보면, 관용은 개인, 집단, 이론, 행위, 사상, 그리고 예술작품 등 무엇이 되었든 특정 대상을 심리적 또는 논리적 근거 위에서 반대하거나 시인하지도 않으면서 용인하는 것이다(King, 1976; 임재형·김재신, 2014).

관용은 무관심의 탈정치화 조장하고 힘에 지배되는 한계도 있어

하지만 고봉진(2016)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어디에도 '관용'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그 이유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념화의 어려움 때문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자유주의에서 주창하는 관용이 가진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무관심과 냉담함이다.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공동의 이해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공적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기보다는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눈감아 버리면 된다. 이처럼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된 관용은 불평등이나 배제, 갈등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 탈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봉진, 2016).

두 번째로 관용이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한계는 관용이 힘에 지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오늘날의 사회가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지배적 가치나 중심 가치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 사회를 지탱하는 지배적 가치는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관용의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한다. 다시 말해 관용은 기존의 지배와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차이를 묵인하는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을 베푸는 것이지, 만약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냉혹하게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Kymlicka, 2002).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관용은 집단적 차원에서 정의를 보완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로 발휘될 수도 있지만, 타인과의 차이를 길들여 중심과 주변을 고착화시키는 정당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관용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차이를 그저 묵인하면서 적대 행위를 줄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지배와 우월성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시도로 사용될 수 있다(이상형, 2016).

2_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비현실성의 한계 극복 '대안'

샌델 “중간수준 공동체 복원이 시민적 덕성 회복의 가장 적절한 해법”

우리는 익명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적인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과거 전통사회의 끈끈한 가족, 따뜻한 이웃을 떠올리고 그리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정치사상도 이와 같은 흐름을 겪어 왔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사상적 기초였던 자유주의에서 강조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규범적 전제가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허구적 상상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세기 말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공동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기존의 전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을 넘어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복고적인 사상이라는 자유주의의 비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권용혁, 2014). 하지만,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정치철학의 근거에는 고대의 덕 윤리 전통이나 근대 공화주의에 대한 향수, 그래서 새로운 시민적 덕(civic virtue)이 요구된다는 논리가 깔려있음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성훈, 2016).

사실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학자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의 간명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샌델(Michael J. Sandel)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모순적이게도 샌델 스스로는 자신을 공동체주의자로 명명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의 논의는 공동체주의의 주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샌델은 현대사회의 경제적 지구화 추세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초국적 거버넌스나 전 지구적 시민사회적 공동체주의(예를 들어, 최현, 2008)를 비판적으로 재진단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된 시민권운동을 재해석하고, 여기서 발생한 특수한 공동체들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더 유망한 토대는 우리가 사는 특수한 공동체들에서 함양되는 시민적 삶의 부활”로 본다(정성훈, 2016).

그는 듀이(Dewey)의 자유주의 핵심개념인 자유를 공화주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제시한다. 자유를 공동체에 대항하는 소극적·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참여적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 미국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도덕적 보수주의가 가져온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공화주의자들처럼 비현실적인 '직접 민주주의적 자치'를 추구하기보다 '중간수준 공동체'(communities intermediate)를 복원하는 것이 시민적 덕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롤스가 제시한 '반성적 평형 개념'을 차용하여 모든 시민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토론을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양천수, 2014).

통합의 지나친 강조가 오히려 공동체 내외부 갈등·배제 야기할 우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지나친 개인주의와 소외의 한파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공동체주의에서 주장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중간수준의 공동체 활동으로 시민적 덕성을 회복하자는, 즉 어디로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이종수,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철학이 그러하듯이 공동체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사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존재론적인 전망과 도덕인식론적인 전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맥락주의적 해석을 벗어나 보편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방법론적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냉혹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면서 국가의 공식성과 관련된 공권력과는 다른 비판적 공공성, 시민적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작은 단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따라 작은 단위의 수많은 공동체가 형성에 따른 갈등의 문제가 첫 번째 한계이다. 다중적인 유대를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각기 다른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보다 더 큰 공동체는 이러한 이질적인 소단위 공동체들 품어야 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연합된 공동체를 위한 충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체주의에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

공동체 내에서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한계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내에서 합의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내에서의 자치 또는 통치도 지배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에 대한 억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정성훈, 2016). 결국, 작은 단위의 공동체 안에서 참여자 간, 그리고 더 큰 단위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간의 자유와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딜레마이다. 공동체주의는 공공선과 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통합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 획일주의와 권위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합만을 강요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종수, 2010).

공동체주의적 접근의 세 번째 한계는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자 배제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외부세계에 배타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의 외부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에서 지향하는 공동체는 배타적인 종교집단이나 인종주의자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관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원적 구성요소를 존중하며, 외부세계에 호혜적 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이다(이종수,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두 가지의 한계와 연결시켜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일원화된 정체성의 강조로 이어져 외부자 배척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3_사회적 자본: 사회구성원 간 경제·정치·문화적 촉매

퍼트남 등 “사회적 자본은 합목적적 행위 가능하게 하는 관계 자본”

최근 연구자들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인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만(Coleman, 1988)이 체계화한 이후,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지역 간의 사회도덕적·경제적·정치적 차이를 분석한 퍼트남(Putman)과 나네티(Nanetti)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연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타인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과 달리 합목적적 행위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 자본으로서 사회적 결합 전체의 고유한 자본을 말한다.¹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오직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개별적 속성이 아닌 함께 보유하게 되는 공유적·체계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요술방망이 아니다”...사회통합 촉매제역할에 의문 제기

많은 이에게 회자되면서 경제발전, 정치발전, 문화성숙을 한 번에 가져다주는 요술 방망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상준, 2004). 첫 번째 한계점은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구조와의 특수적 관계 때문에 악순환과 선순환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들이 경제적·법적·정치적 제도들과 그 작동방식의 안정성에 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참여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신뢰는 더욱 성장하고 연대는 공고해져서 사회적 자본의 강화로 이어진다.

¹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이론적 전통의 차이로 인해 학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자본을 축적된 역사로 인식했던 부르디외는 경제재에 국한하였던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 상징적 자본이라는 확장된 자본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 중에서 사회적 자본을 “현실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로서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면, 미국 합리적 선택 이론 진영을 이끌었던 콜만은 효용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관계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그의 학문적 지향과 일관되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콜만의 사회적 자본개념과 토크빌의 자치규범 논의를 연결시켜 자신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발전시킨 퍼트남은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로 정의한다(김상준, 2004).

반대로 신뢰가 결여되어 있거나 시민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지 못한 곳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생성되지 못한다. 즉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곳에서는 경제, 정치, 사법이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이 때문에 체계 신뢰가 낮아져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귀결되어 결국에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Rosa, Gertenbach, Laux and Strecker, 2010).

다른 한계점은 사회적 자본이 과연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비록 퍼트남이 '사회적 자본=정치경제 성공'이라는 명료한 등식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가 강조했던 '연대와 신뢰'의 관계성은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연대와 신뢰는 '유사성과 동질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연대는 동질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신을 '경계 짓는 곳'에서 형성되고, 신뢰는 이러한 연대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의 높은 수준의 연대와 동일시, 그리고 강한 신뢰는 다른 집단들에 대한 의식적인 경계 짓기와 상호관계의 거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경제적·시민사회적인 제도들의 기능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ibid).

이 때문에 퍼트남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자본의 초기 논의를 확장발전시켜서 이후에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고 의무관계를 확립하는 '결속적 사회 자본' 이외에 개방적으로 이방인을 대하고 신뢰하며 협력관계와 사회적 통합 능력을 갖고 있는 '교량적 사회 자본'을 구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철학	평가	정책과제
자유주의 (관용)	의의	▶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제시
	한계	▶ 불평등이나 배제, 갈등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 탈정치화 야기 ▶ 관용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기존의 지배와 우월성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시도로 악용될 가능성
공동체 주의	의의	▶ 시민이 참여하는 중간수준의 공동체를 통해 시민적 덕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제시
	한계	▶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연합된 공동체를 위한 충성을 이끄는 방법 부재 ▶ 공동체의 통합성을 강조하게 되어 획일주의와 권위주의로 연결될 가능성 ▶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외부세계에 배타성을 보일 가능성
사회적 자본	의의	▶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개별적 속성이 아닌 함께 공유하는 체계적 속성을 갖고 있어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협력이 가능
	한계	▶ 신뢰가 결여되어 있거나 시민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지 못한 곳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생성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 ▶ '사회적 자본=정치경제 성공'이라는 등식과는 달리, 기본 논리인 연대와 신뢰는 '유사성과 동질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경계 짓기와 상호관계의 거부를 동반할 수 있음

[표 2]
기존
정치철학의
의의와 한계

03 / 사회적 우정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 '열쇠'

최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이 민선 5·6기 서울시정을 이끄는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존중 도시, 복지시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도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과 같이 공동체적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왔다면, 이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하고 이것을 이끄는 핵심적 개념이 바로 '사회적 우정'이다. 이 장에서는 사적 관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 우정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1_우정: 사적 관계 포함 정치적 관계 형성하는 가치

박원순 시장이 천명한 '사회적 우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매우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개념이지만, 대부분 친구처럼 사적 관계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사적 영역의 "우정"이라는 모순적인 용어를 결합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회적 우정은 우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속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 상술하였다.

우정은 공공성 추구 위한 사람 간 관계에 초점·동지애와 구별한 필요

하지만, 우정은 오랫동안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관계는 협의적인 정치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사람 간의 다자적인 "사회적 관계"인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정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움직이는 핵심적 가치인 것이다.

실제 우리에게 너무 익히 알려진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정은 하나의 공동체가 연대성을 형성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타인의 선을 바라는 심정”이 바로 우정이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공동선이 형성될 수 있고 타인과 나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이상형, 2016: 339). 흔히 알고 있는 필리아(philia)는 “서로 호의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혹은 훌륭하기를 바라며, 또 그런 호의나 바람이 서로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며,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우정은 단순히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강철웅, 2007).

하지만, 근대 이후 우정은 친구관계라는 친밀성으로 귀결되는 사적 영역에서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낯설다. 이것은 근대 이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별이 강화되고 우정은 단지 사적인 관계에서만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고착화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이상형, 2016: 340~343).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정과 유사한 개념인 동지애(companionship)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동지라고 부르고, 회사 동료와 같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성취하려는 관계는 동료라고 한다(이상형, 2016: 343~348). 우정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우애는 이해타산적인 원자화된 개인 간의 관계에 방점을 둔 것이다.

구분	목표=공동선	사회적 속성
개념1 =	▶ 하나의 공동체가 연대성을 형성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 ▶ 타인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타인의 선을 바라는 심정
개념2 =	▶ 상대방이 잘 되기를 혹은 훌륭하기를 바라는 호의나 바람이	+ ▶ 서로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표 3]
우정의 개념에
포함된 사회적
속성

겍하트 “우정의 관계 형성할 때 민주주의적 인간관계 성립 가능”

우리는 늘 마스크를 통해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평등과 불공정한 현실을 접하게 된다. 우리는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난다. 사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저마다 생각을 달리한다.

앞서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치철학적인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확인하였고, 새로운 대안적 가치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정” 또는 “사회적 우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와 유사한 주장은 겍하트(Gebhardt, 200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겍하트는 경제적 불평등이 앞서 살펴보았던 ‘정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면, 정치적 불평등은 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서와 같이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Avramenko, 2008 재인용).

겍하트에 따르면, 우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 간에 동등한 동료로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동지로서 이해하는 것(이것은 앞서 우정과 구분했었던 동료애와 맥을 같이 한다)을 넘어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고 본다. 더 나아가 함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선을 지향하는 우정의 관계를 형성할 때 민주주의적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적 질서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동체주의적 접근을 통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문제	해결방안	기존 정치철학과의 관련성
경제적 불평등	정의 공정성	▶ 자유주의적 접근과 동일
정치적(사회적) 불평등	우정	▶ 자유주의의 “관용” 대신 “우정”을 대안으로 제시 ▶ 사회를 운명공동체로 바라봄으로써 공동선을 강조한 공동체주의적 속성을 포함

[표 4]
겍하트가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방법

2_사회적 불평등 해결하는 우정의 4가지 민주적 속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 또는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정의 또는 공정성의 논리로 접근하고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은 우정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겍하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견지를 따르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정을 통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정은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러한 우정의 관계로 민주주의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겍하트의 주장처럼, 우정은 본디 민주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렌트(Arendt)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속성을 규명한 박혁(2017)의 연구에 기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① 동등성: 정치적 평등·비지배의 정치인 민주주의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

우정의 관계는 동등하다. 이러한 동등성이 정치적·사회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배관계가 아닌 비지배의 정치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우정으로 차이와 다름,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인정과 수용이 가능하다(박혁, 2017). 아렌트(Arendt, 2007; 박혁, 2017 재인용)는 다음과 같이 우정을 평가한다.

“우정에서 평등화는 물론 친구들이 서로 같아지거나 동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세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공영역의 미덕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정, 연민, 형제애, 박애는 정치적 미덕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이러한 사적 영역의 미덕을 공공영역에서 작동시킬 경우 공공영역은 심각하게 손상될 뿐만 아니라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공공영역의 미덕 중의 하나로 우정을 강조한 바 있다(홍원표, 2008).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살펴보았던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관용은 사적 영역의 미덕으로 공공영역의 핵심적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인 정의를 보완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로 발휘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가진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우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首相) 전 총리가 주장했던 ‘우애사회(友愛社会)’와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유키오가 주장한 우애사회론은 1996년 ‘논좌(論座)’에 발표한 “우리 자유주의 우애 혁명”이라는 글에 제시되었던 것을 재창한 것이다. 사실 우애는 하토야마가의 가전(家傳)으로, 자유가 지나치면 평등이 상실되고, 평등이 지나치면 자유가 상실되는 등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기 어렵지만, 양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우애라는 것이다.

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시절 주일 특명 전권 대사로, 일본인 아내(미치코)를 두었던 쿠덴호프 칼레르기의 저서 「자유와 인생」(1952)에서 주창한 것으로 하토야마가 정치사상 철학으로 수용한 것이다. 하토야마는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가 쿠덴호프 칼레르기의 저서를 번역해 출판했을 때, 박애를 우애(Fraternity)라는 번역했던 것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애라는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그는 조부와 달리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애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즉, 일정한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유지하면서도 빈곤과 격차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방향성으로 "우애"의 이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당내 신자유주의적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보수주의 세력들 간의 연결점으로서 우애의 이념을 활용하였다. 문제의식은 이 연구와 맥을 같이 하지만 하토야마가 주장한 우애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렌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애의 본래 개념인 '박애'는 사적 영역의 미덕으로서 이를 통해 공공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공공영역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어 멀리했다는 점을 보면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우정과 차이가 있다.

②조화: '차이·결속' 상반된 요소 성공적 결합으로 사회성원 간 통합 유도

우정의 또 다른 민주주의적 속성은 조화의 추구이다. 민주정치는 차이와 다름이 아닌 다양성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배제와 획일화가 아닌 조화를 이끄는 것이며, 우정은 차이와 결속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의 성공적인 결합으로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박혁, 2017).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경쟁과 차별화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긴박하고 끝없는 경쟁만 계속된다면 결국 사회는 해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정이다.

③세계성: 친밀함 토대로 배타성, 병리·기생적 관계서 벗어나는 토대 제공

우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민주적 속성은 세계성이다. 이러한 세계성은 친밀함을 토대로 한 배타성이나 병리적·기생적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즉, 나와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세계 또는 가치관을 가졌더라도 인정하고 서로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연대와 존중이 바로 정치적 우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것의 핵심적 요소로 친밀성(intimacy)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성훈(2006)은 전면적인 공동체나 사회 전체의 공동체화가 현대적 조건과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현대적 조건을 고려한 친밀공동체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물론, 친밀성은 개인의 가장 내적인 삶으로 온정, 신뢰, 감정들을 터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친밀성은 관계의 내밀함을 추구하면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낯선 존재의 배제, 제거, 증오라는 폭력성이 훨씬 높은 적대의 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박혁, 2017: 67.)

이에 비해 우정은 세계의 공간이 우리 사이에 끼우는 거리를 두고 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Arendt, 1990). 이 때문에 자유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의 독립성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④소통성: 타인의 세계 공감·이해로 다양한 의견 열린 모습 그대로 수용

우정의 마지막 민주주의적 속성은 소통성이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얘기를 나누지는 않으며, 우정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진실한 대화로 상대방이 인격으로서의 나와 동등하지 않지만,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공감하고 이해하여 다양한 의견을 열린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Arendt, 2007). 바로 이래서 우리는 정치적 불평등을 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정의 속성과 개념		기존 정치철학의 차이
동 등 성	▶ 차이와 다름에도 지배가 아닌 비지배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	▶ 자유주의(관용, 박애)와의 차이 - 관용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정에서 강조하는 차이를 가진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님 * 박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首相)의 '우애사회(友愛社會)'
조 화	▶ 차이와 다름을 다양성으로 보고,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배제와 획일화가 아닌 조화로 이끄는 것	▶ 사회적 자본과의 차이 - 연대와 신뢰는 '유사성과 동질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경계 짓기와 상호관계의 거부를 동반할 수 있어 조화로 이어지지 못함
세 계 성	▶ 나와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세계 또는 가치관을 가졌더라도 인정하고 서로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연대와 존중	▶ 자유주의와의 차이 -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지나친 강조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를 일으킬 수 있음
	▶ 세계의 공간이 우리 사이에 끼우는 거리를 두고 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	▶ 공동체주의와의 차이 - 공동체의 통합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획일주의와 권위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의 자유가 간과될 우려가 존재
소 통 성	▶ 나와 동등하지 않지만, 타인의 세계를 공감하고 이해하여 다양한 의견을 열린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친밀성: 관계의 내밀함을 추구하면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낯선 존재의 배제, 제거, 증오로 귀결될 수 있음

[표 5]
우정의 민주적
속성

04 / 사회적 우정으로 '함께 만드는 서울'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갈등을 줄여 서울이라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 우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이 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민선5기와 민선6기의 정책들을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돌아보기 위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사회적 우정과 연관성이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기존 정책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1_ 서울시 민선 5~6기, 사회적 우정 관련 각종 정책 추진

건강도시, 좋은 일자리 창출, 건전재정 실현 등 다양한 사업 선도적 추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의 정책목표와 세부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만, 정책목표별 중점추진 사업 중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적 우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세부사업만 별도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우정과 관련된 세부사업을 선정할 때 앞서 살펴보았던 우정의 4가지 민주주의적 속성인 동등성, 조화, 세계성, 소통성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속성들이 간접적으로 고양되어 사회적 우정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표 5]는 민선5기의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사회적 우정과 관련된 세부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5개의 정책목표 중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과 관련된 정책들의 세부사업들이 사회적 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정책목표	정책목표별 '사회적 우정' 관련 세부사업	
	2012년	2013년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보편적 복지 . 시민복지기준 메아리단 운영 교육격차 해소 . 서울교육·복지협의체 구성 . 동행프로젝트 확대	보편적 복지 . 나눔이웃, 행복한 방 만들기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 어린이집 부모참여 현장점검팀 운영 . 청소년시설 참여예산제 . 청소년 소리방 개설
함께 잘 사는 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	사람중심의 도시 관리 .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생활권계획 수립 에너지 생산도시 구현 . 시민 협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서울 생활공동체 복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정착 . 시민모니터링단 .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열린/참여시정으로 시민권리 증진 . 서울정보소통센터 개설·운영 . 시민참여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운영 . 시민발언대 운영 . 마실 운영 . 1일 시민시장 . 청책워크숍 사회혁신 추진	열린/참여시정으로 시민권리 증진 . 시민참여 옴부즈만 .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 민원배심법정 . 시민발언대 운영 . 청책워크숍 사회혁신 추진 . 정책박람회 개최

[표 6]
서울시의
민선5기 정책

정책목표	정책목표별 '사회적 우정' 관련 세부사업		
	2015년	2016년	2017년
안전한 도시	-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더안전' 시민모임	소통과 혁신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더안전' 시민모임
따뜻한 도시	여성이 함께 만드는 서울 · 젠더옴부즈만 운영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서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추진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 서울 여성가족 젠더 거버넌스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강화 · 모두의 학교 조성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추진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강화 · 청소년의 시정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열린 도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혁신 · 정책아이디어 마켓 소통과 개방으로 참여시정 강화 · 현장시장실 운영 · 명예부시장 및 서울시정학교 운영 · 시민청 확대운영 · 시청트럭 운영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혁신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세부사업 · 서울혁신파크 운영 · 정책박람회 소통 강화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 · 시민청 운영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혁신 · 마을활력소 조성 시민소통 강화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 · 시민청 운영 공정세정과 건전재정 실현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표 7]
서울시의
민선6기 정책

특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과제 중 '열린 시정, 참여 시정으로 시민권리 증진'과 관련된 세부과제가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시행초기 우려의 목소리와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시민발언대 운영'이나 '청책워크숍'은 서울시민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가 말하고, 그 의견에 대한 찬성의 여부를 떠나 타인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다음으로는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정책 중 상대적으로 사회적 우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그동안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반영되기 어려웠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행된 '청소년 소리방'도 사회적 우정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민선5기는 특정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사회적 우정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다가 점차 다른 정책목표로 확대되는 경향이 보인다. 물론, 업무계획에 제시된 정책들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부사업을 포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와 경제정책들은 중심적인 수행기제로서 사회적 우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세부사업들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에는 민선6기의 정책목표별 세부과제들이 정리되어 있다. 서울시는 민선5기의 정책목표를 최대한 승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민선6기의 정책목표들이 이전과 유사하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민선6기에서는 사회적 우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열린 도시'라는 정책목표에 재정리하고, 이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현장시장살'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자 노력하였고, 많은 시민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바 있다. 또한 경찰과 소통의 공간을 명시하고 기획, 전시, 공연, 휴식, 놀이 등 다양한 시민활동뿐만 아니라 토론과 교육의 방식으로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발의하고, 함께 모여 토론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을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우정을 꽃피우고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회적 우정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이다.

2_ 시정 기조, 사회적 우정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서울시·서울시민 간 소통에만 초점 둔 한계...시민발언대가 대표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회혁신 수용,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지역사회 복지체계 재구성, 인권도시 지향 등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조권중, 2016). 이 과정에서 '시민발언대', '청책익크숍'에서부터 '시민청'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서울시는 이전 민선시장에 비해 민선5기와 민선6기에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우정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그동안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을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 우정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민주주의적 속성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기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 해를 돕기 위해 앞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했었던 '시민발언대'를 예로 들어 보자. 서울시는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 있는 스피커스코너(Speakers corner)를 벤치마킹하여 2013년 1월부터 서울시청 야외에 마련된 무대에 서울시민들이 직접 올라가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 개선사항 등을 말하고, 서울시는 시민의 발언내용을 동시녹화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서울시민들에게 공유함은 물론 시정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행초기 야외운영에 따른 기후나 주변소음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는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1층에 조성된 시민청에서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전 세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애환이나 사연을 얘기하는가 하면 민원이나 건의에서부터 서울시정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제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얘기가 오갔고 서울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민과 서울시 간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우정이 싹트는 데 필요한 동등성, 조화, 세계성(독립적인 공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 우정은 시민·서울시 아닌 시민 간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우정은 단순히 서울시민과 서울시 정책입안자 간의 소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면서(사회적 우정의 세계성), 서울시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받아들여(사회적 우정의 동등성) 서로 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배제나 일방적인 생각의 강요나 통일성만을 주장하기보다 다양성의 존중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사회적 우정의 조화)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발언대’를 재검토해보면, 그동안 많은 시민이 서울시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서울시는 그것을 귀담아들었지만 정작 이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던 다른 시민들이 그 목소리 주인공의 다양성을 인정함은 물론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로 받아들였는지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음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시민 간의 사회적 우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을 활력소’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이용주민이 없어 방치된 시설을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마을의 나눔터 및 사랑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경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 간의 소모임을 운영하여 상호 이해의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문제, 사회적 우정 키워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2018년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유도시’라는 사회혁신 비전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으로 ‘커뮤니티 도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우정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토대를 바꾸겠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도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사는 도시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나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사회적 우정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를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민선5기가 시작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마을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기(2013~2017년)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서울시민 100명 중 1명(13만여명)이 마을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도 높고 서울 곳곳에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마을공간지원, 마을기업 등 330개가 넘는 주민주도 공동체 공간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만나고, 더 나아가 공공과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시민들에게 '마을'이라는 단어가 옛날 농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을임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 성과만큼 비판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사회적 우정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자체는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는 이미 사회적 우정이 자리를 잘 잡고 있다.

물론, '서울마을주간' 등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된 다양한 마을과 자치 활동의 의미와 성과를 나누는 장이 마련되고 있지만, 단순한 정보의 교류를 넘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공동체 간의 사회적 우정의 연결통로나 정책기제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우정의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무관심과 소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서울시민의 사회적 우정을 형성시키고 확장할 때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우정의 가치를 이것에만 국한하는 것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던 '마을 활력소' 사업도 지역민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정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의 거점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연합된 공동체를 위한 충성을 이끄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공동체의 통합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자칫 획일주의와 권위주의로 연결될 위험성을 검토하였고, 공동체 구성원이 외부세계에 배타적일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서울시민의 행복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되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도 보장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서울시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정치철학의 기초를 사회적 우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봉진, 2016, “자유주의적 관용의 역사적 전개와 그 한계”, 『법철학연구』, 19(2): 153-176.
- 권용혁, 201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회와 철학』, 28: 105-130.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박혁, 2017, “우정의 관계가 지닌 민주주의적 함의에 관한 정치사상적 고찰”, 『21세기 정치학회보』, 27(1): 61-84.
- 윤현숙·이미진, 2007, “은퇴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2): 393-408.
- 양천수, 2014,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17(2): 205-242.
- 이상형, 2016, “우정의 정치학”,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 79: 333-358.
- 이종수, 2010,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자유주의와의 논쟁 고찰”, 『지방정부연구』, 4(3): 5~22.
- 임재형·김재신, 2014,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OUGHTOPIA』, 29(1): 149-174.
- 정성훈, 2016, “공동체주의 공동체의 한계와 현대적 조건에서 현실적인 공동체”, 『도시인문학연구』, 8(2): 133~154.
- 최현, 2008,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경제와사회』, 79: 38-61.
- 홍원표, 2008, “정치적 책임과 용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이해.”, 『21세기 정치학회보』, 18(2): 1-21.
- Arendt, Hannah, 1990, “Philosophy and Politics”, Social Research 1(57): 73-103.
- Arendt, Hannah 저·김선옥 역, 2007, 『정치의 약속』, 푸른숲.
- King, Preston, 1976, Toler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Kymlicka, W., 2002,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Gebhardt J., 2008, Friendship, Trust, and Political Order. Friendship and Politics: Essays in Political Thought (eds. J. Von Heykin, R. Avramenko),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313-348.
- Gertenbach, L./Laux, H./Rosa, H./Strecker, D., 2010, Theorien der Gemeinschaft zur Einführ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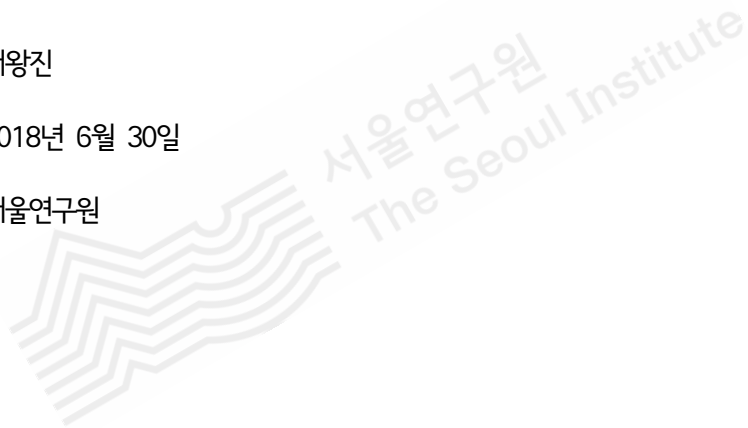
서울연 2018-OR-08

각자도생 시대 오롯이 살아가는 서울시민들
사회적 우정으로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어야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6월 3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329-7 93330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